

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

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(담당 : 이은미 팀장 02-723-5302 emlee@pspd.org)

제 목 [논평]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

날 짜 2015. 7. 17. (총 2 쪽)

논 평

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기업인 사면해선 안 된다

기업인 일부 사면으로 경제 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

부패 사범 사면, 국민통합 역행할 것

1.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'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사'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대상자 검토 등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 또한 어제(7/16)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결과,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 들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. 사면은 3권 분립과 국가 법질서를 흔들 수 있을 만큼,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, 더욱이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, 참여연대는 부패 기업인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.
2.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,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. 하지만,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왔다.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으나 국민통합이 부패 기업인 사면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. 도리어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하여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따름이다. 또한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를 구속하고, 세

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·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. 결국 국민통합은 핑계일 뿐이며,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도 국정 후반부 체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. 결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 끝.